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63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. 25.

발 의 자 : 김성주 · 강선우 · 고영인
김희재 · 남인순 · 서영석
송영길 · 송옥주 · 전해숙
정필모 · 최종윤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기초연금제도를 모르거나, 제도를 알더라도 시·군·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기초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.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신청방식의 다양화 등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.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·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·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

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, 신청자의 소득·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,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·판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기초연금 지급신청서 작성·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0조제3항)
- 나.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따른 소득·재산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3조제2항)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법인·단체·시설·기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여부를 결정할 때 제11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·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·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기초연금 지급의 신청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기초연금 지급의 신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법인·단체·시설·기 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 연금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 다.</u>
③ (생 략) 제13조(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13조(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의 발생여부를 결정할 때 제11 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·정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 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·재산 수준이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 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 부를 생략할 수 있다.</u>
② (생 략)	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

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 연금 수급권의 발생·변경·상 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④ -----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	--